

문화전당 '랜드마크' 대폭 보강

박광태 시장·김명곤 문광·지병문 의원·송재구 위원장 합의

설계 보완뒤 공개...여론 재수렴키로

지하 중심 구조물로 설계돼 랜드마크(Land Mark)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광주시장, 김명곤 문광부 장관, 열린우리당 지병문(국회 문광부 소속) 의원, 송재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4명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

능을 보완하는 설계 변경 등 일련의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시장은 30일 “광주시민들 대다수가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김명곤

문화부장관에게 건의했고 김 장관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김 장관이 지역 여론상 랜드마크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지병문 의원도 “문화부에 의한 문화전당 국제공모 당선작이 설계 지침에 따라 지하 중심으로 설계돼, 국제

적인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바라는 광주시와 시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문화전당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장과 장관 등 4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 병문은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안 수립과 문화전당 건립을 놓고 광주시와 문광부가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작 김 장관과 박 시장, 송 위원장 등이 단 한차례도 협의를 갖지 못한 점을 고려해 4자 회동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랜드마크 기능 보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며, 이후

랜드마크 기능 보완 방법이나 절차 등을 실무자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랜드마크 기능이 보완된 설계가 작성될 경우, 이를 광주시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여론을 재수렴한 뒤 광주시가 다시 문광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보완 설계과정 등에서 문광부와 시의 이견이 생길 경우 또 다시 회동을 갖고 최종적인 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송재구 위원장은 “국책사업이지만 광주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사만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전남의 '부자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0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기칭 '부농을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위직령기자 jnwi@kwangju.co.kr

부자 농촌 만들기 '부농'들이 뭉쳤다

연 1억이상 소득 400여명 모임 결성

농업이 '천덕꾸러기' '사양 산업'

으로 불리운지 오래다. 그러나 농업만으로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부농(富農)의 꿈'을 다른 농민들에게도 확산시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오후 전남도 농업기술원 교육관에는 전남도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 200여명이 모였다. 가칭 '부농을 일구는 사람들'이란 모임의 발대식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는 모두 405명이 참여한다. 자격은 농민 개인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법인은 5억원 이상이다.

이들의 고소득 비결은 뭘까.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신만의 특성화, 농작물이든 축산이든 자신만의 특징적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면 개방시대 농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애

게 유통시키고, 생산비용을 줄이며, 부가가치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분야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농을 일구는 사람들'은 고소득 농업인들의 신기술 정보 교류와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며 다른 농업인들도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남도가 나서 추진해왔다.

한편 지난 2005년 말 현재 연간 1억원(법인 5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남도내 농업인은 599명, 법인은 62개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59%, 식량작물 12%, 채소 11%, 과수는 6%를 차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긴급조치 판결' 판사 오늘 명단 공개

과거사위, 총 492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의 결정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게 아니라 판결

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인쇄를 마쳤으며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 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항소·상고심 판결 1천412건의 사건

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조사보고서

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국빈관에서 재개된다.

북핵 6자회담 재개 내달 8일 베이징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내달 8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鯉魚臺) 국빈관에서 재개된다.

<관련기사 5면>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회담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을 2월 8일 베이징에서 재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그 기간은 열려 있으며 회담 전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은 점진 적이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으로서 중국은 각 회담 참가국들이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발표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실무회의 개시를 10여분 앞두고 나왔다. /연합뉴스



ALL LASH MASCARA

